

금남로에서



장필수
예향40주년기념위원장

지금부터 24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인구 문제는 인류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고 설파했다.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해도 문제지만 줄어도 문제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했지만 요즘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대책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국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구다. 1인당 GNI(국민 총소득)가 20만 달러에 가까운 리히텐슈타인과 10만 달러가 넘는 모나코, 버뮤다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구가 적은 소국이기 때문이다.

정주인구 적은 전남 생활인구에 사활

흔히 국력을 평가할 때 1인당 국민소득과 GDP(국내 총생산)를 활용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인구 5000만명이 넘는 이른바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에 불과하다. ‘G7’은 아니지만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자 영향력 있는 국가로 평가받는 것도 ‘30-50 클럽’ 회원 영향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에서의 인구 양극화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수도권에 살면서 지방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가 최대 현안이 됐다. 지금

생활인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은 달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주인구 늘리기 경쟁이 치열했다. 광주에서 전남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대다수는 근무지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주소까지 옮기는 촌극이 비일비재했다.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실제 거주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남의 현실이다.

거주인구에 올인했던 지자체들이 최근에는 생활인구에 주목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정부가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내놓은 새로운 개념의 인구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근무나 통학, 관광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까지도 그 지역 인구로 보자는 것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도 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영암군을 포함해 전국 8개 시군을 생활인구 시범산정 지역으로 선정해 테스트해 본 뒤 올해부터는 국내 인구감소지역 89곳 모두로 대상을 확대했다. 전남에선 22개 시군만 통학, 관광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까지도 그 지역 인구로 보자는 것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도 입했다. 특히 구례는 주민등록인구가 2만4134명인데 반해 생활인구는 18.4배나 많은 44만9206명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차이가 가장 컸다.

전남의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차이가 큰 것은 정주인구에 비해 축제 등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정주인구가 많아야 좋겠지만 어렵다면 생활인구 늘리기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혁신도시 27기 추진이나 신재생에너지가 넘쳐나는 호남지역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해 자연스럽게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데도 지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듯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자체들이 생활인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위계이전은 생활인구 늘리기에 안성마춤이다.

지역소멸 극복 대안으로 활용해야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전남에서도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등 선도지역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여수는 바다와 도심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해 성과를 내고 있고 순천은 순천만국가정원내 국내 유일의 정원위계이전으로 연말까지 예약이 차 있다. 곡성은 귀촌 청년들이 만든 협동조합인 ‘팜앤디’가 ‘리스티 타운’이란 기업 중심 위계이전으로 성공 신호를 쓰고 있다. 위계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대기업 등 217개 기업을 곡성으로 불러들였다.

강진군은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 체류인구 늘리기에 성공했다. 농가에서 1주일 살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인 ‘푸소(FUSO)’를 브랜드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5만7000여명을 불러들였고 농가에는 52억 8000만원의 소득을 안겼다.

역발상은 흔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 전남은 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지만 ‘50대 이상 관광소비 비중 전국 1위’ 데이터 등에서 확인돼 듯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문제는 이를 위계이전 등 생활인구를 늘리는 기회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시장과 군수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각자도생의 시대, 환경 탓을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社說

입학준비금 5만원 추가 부담 거부한 자치구들

교육과 육아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점을 감안해 광주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애초 입학준비금(초등 10만원, 중·고교 25만원) 사업은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중·고교생 지원을 5만 원 올려 30만원으로 결정된 지난해와 올해에는 5개 자치구들이 추가 예산분(1인당 5만원)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던 시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입학준비금 사업은 광주시와 교육청, 5개 자치구가 공동 부담을 통해 4만 명에 이르는 초·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초등 10만원·중·고등 25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면 서 적어도 교복 값인 30만 원 정도는 지원해주자는 의견이 많아 중·고생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5만 원 올려 30만 원으로 결

정했다. 이처럼 취지는 좋았지만 ‘5만원 추가 부담안’ 결정 당시 광주시와 5개구의 협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5개구 사이에도 일부 이견이 노출, 결국 5개구가 1인당 5만원의 추가 부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구청들이 거부한 2년치 추가 부담분 7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사리 중·고교 입학지원금 30만원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 광주시와 5개구, 시교육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5개구의 의견이 대체로 30만원에서 다시 25만원으로 주자는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한다.

구청당 한해에 적게는 1000만 원대에서 많게는 8000만 원대 정도 예산을 추가하면 해결될 일이다. 자녀 교육시키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 5개 구청이 대승적인 차원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광주 첫 반려동물 복지시설, 동물복지 모델로

광주에 처음으로 반려동물 복지시설이 들어선다. 반려동물 공원으로, 영산강변인 서구 영산강대상공원에 2027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원의 주요 시설은 잔디광장과 산책로, 야외 훈련장, 동물 놀이터 등으로 주인과 반려동물이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공감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화 교육센터에선 입양 및 동물보호 교육, 동물행동 교육 등 반려인의 소양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민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반려동물 공원 조성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광주시는 30만 반려인의 염원을 담아 5개 자치구에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자치구와 협의해 우선 2027년까지 세 곳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그동안 반려동물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구

건국동에 있는 동물보호소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다 대표가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불상사를 겪기도 했다. 화장장은 한 곳도 없어 반려인들이 인근 시군으로 원정 화장을 가거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반려동물 공원 외에도 유기동물 보호시설인 광역동물보호센터를 다음달 완공하고 민간에 위탁했던 동물보호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화장장 설치다. 광주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법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설치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다. 광주시도 화장장 설치는 장기 과제로 뒤편다. 광주에 첫 반려동물 복지시설이 들어선 것을 계기로 광주시가 동물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無等鼓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스포츠가 있다. 남·여 개인과 단체, 혼성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양궁이다. 하나의 금메달을 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려 5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했다는 점은 기이 경이로울 정도다.

양궁은 대표적인 ‘멘탈 스포츠’로 불린다. 관중의 아우와 함성, 바람, 상대 선수의 점수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압박에도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경기에 임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양궁 선수들의 멘탈 관리는 아시아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할 때마다 화제가 되곤 한다. 한국 올림픽 역대 최다 금메달(5개)을 딴 김우진 선수가 대표적이다. 2020 도쿄올림픽 개인전 당시 상대 선수의 심박수가 분당 160bpm 일 때 70bpm 대를 유지했던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피나는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심리 상태는 김우진 선수의 강점이기도 하다. 도쿄 올림픽에서 첫 양궁 3관왕을 차지했던 안산 선수 역시 강철 멘탈로 유명하다. 경기 내내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안 선수의 멘탈 관리법은 ‘자기암시’다. “졸지 말고 대총좌!” 스스로에게 전하는 자기암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멘탈 관리는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정보 과부하, 경쟁, 각종 사건사고가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요소다. 공부에 찌든 학생이나 하루 온종일 동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직장인,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온 몸으로 받고 있는 주부들도 마찬가지로

이들 전 광주에서 발생한 직장 동료 살인사건에 지역 사회가 슬렁였 다. 정확한 방범통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장 내 업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에 빠진 직장인들을 위해 최근 인터넷 검색중 발견한 직장인들을 위한 5가지 멘탈 관리법을 공유한다. ‘화가 나는 포인트를 파악하라’, ‘자신만의 대처법을 만들어라’, ‘ 분노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무덤덤해지게 하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야기하라’, ‘업무 외 시간에는 자기관리에 투자하라’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은편칼럼



강대석
시인

우리나라의 수많은 섬 중 국민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섬은 독도일 것이다. 그만큼 독도를 찾는 이도 많고 홍보활동을 하는 이들도 많다. 80년대 초 정광태가 불렀던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은 독도에 대한 깨달음 같은 정보로 대중의 관심을 촉발하며 정부도 못한 독도 사랑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뒤이어 서유석이 불러 히트했던 ‘홀로 아리랑’ 역시 외로운 섬 독도를 민족의 품안으로 끌어들이 민족애와 통일외식을 일깨워 주었다.

지난 8·15 광복절을 전후해 독도가 주목을 받았다. ‘독도 지우기’ 논란이 제기되며 야당의 진상조사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 산하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과 관련 영상 TV가 시설 노후를 이유로 철거되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던 광화문역 등 3곳의 ‘독도 조형물’을 승객들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철거했다. 일부 시민들의 ‘독도 지우기’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교통공사는 독도지우기는 정치공세라며 철거된 독도 조

독도 연가

형물 대신 벽걸이 TV를 설치하여 독도영상을 송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설치를 약속(일부 역은 TV 재 송출)으로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취해 온 대일 행보를 보면 독도지우기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었다. 그동안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친일 저자세 외교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고 일제시대 우리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장관직에 임명되는 것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뉴라이트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약하다’며 낮은 단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도를 지켜낸 것은 사실 정부보다 민간인들의 힘이 컸다. 1698(숙종24)년 동래의 어부 안용복은 울릉도 근해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왜인들을 발견하고 모두 쫓아낸 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관백(官首)으로부터 왜인들의 독도 출어금지 공항을 받아냈다. 안용복의 활동으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확고해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울릉도에 사는 특무상사 출신 홍순철이 독도를 지켰다. 6·25 참전 경험이 있던 홍순철은 가산을 털고 의연금을 모금하여 부산에서 M1소총과 기관총 등 무기를 구입한 후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했다. 수비대를 이끌고 독도로 들어가 1953년 6월 독

도로 접근하는 일본 수상고등학교 실습선을 돌려보내고, 7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PS9함을 발견하고 울릉경찰서 경찰 3명과 함께 총격전을 벌여 격퇴시키는 등 3년이 넘게 독도를 지켰다.

요즘 장성의 조그만 쌀 고자 제조업체인 ‘올바름’이란 회사가 독도사랑으로 화제이다. 이 회사는 유아용 쌀과자를 만드는 중소기업으로 과자봉지에 독도사진과 함께 ‘독도는 한국 땅’ 문구를 인쇄하여 동남아 수출로 독도 알리기에 열심이다. 최근 일본의 한 업체가 독도 사진을 지우면 매출의 15%를 수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업체대표는 거부했다. 일본 수출길이 막혔지만 이 사실이 뉴스로 알려지자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우리 국민의 독도사랑을 단면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은 집요하다. 일본의 로비로 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나라가 점차 늘고 있다. OECD 국가 38개국 중 일본해로 표기한 나라가 15개국이며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나라가 9개국, 동해로 표기한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국방부조차도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나 심각하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1차 책무지만 정부가 주저하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한다. 국민들이 독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할 때 어떤 정부든 독도수호의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고

차(車)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명,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중에 28명, 보도 통행 중에 24명, 기타 지역에서 253명이 사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세 명 중 한 명이 ‘차대사람’ 사고로 사망했고, ‘차대사람’ 사고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도로횡단 중에 발생했다. 전남지역에서도 작년 한 해 도로횡단 중에 22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안타까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남도는 바둑형 보행신호등 확충 등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무신호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 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보행자 전용길 조성 등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또 전남경찰청, 전남교통연수원과 ‘보행교통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차·만·손 운동)’도 그중 하나이다. 차·만·손 운동은 보행자가 도로횡단 시 운전자에게 도로횡단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전달하는 운동이다.

단순히 손을 들고 건너는 것만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작년 8월 서울역 부근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실험한 결과, 도로횡단 시 손짓을 했을 때 차량 일시 정지비율이 89.5%로 조사됐다. 57차례 실험한 결과 51번 차량이 멈춰 선 것이다. 보행자의 손짓에도 그냥 지나친 경우는 6건에 불과했다. 보행자의 적극적인 횡단의사 표시가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차·만·손 운동은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 먼저 보행자는 첫째,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둘째,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뻗는다. 셋째, 운전자와 눈맞춤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넷째,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면 된다.

반면, 운전자는 첫째,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둘째,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 정지한다. 셋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면 조심해서 지나가면 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삼색 신호등은 1920년에 미국 디트로이트 경찰관인 윌리엄 포츠가 발명했다. 신호등의 발명으로 보행자는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무신호 횡단보도다. 우리 주위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무신호 횡단보도도 많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그 외 지역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차·만·손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손을 들고 횡단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자. 우리가 드는 손이 운전자에게 신호등의 ‘적색(정지) 신호’와 같은 의미를 전달할 것이다. 차를 만날 때 손을 들고 소통하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

해마다 이맘때면 4년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각나 눈시울이 젖는다. 시어머니는 추석마다 내 주먹만한 송편을 빚고, 문어를 삶고, 간지마회를 준비해 놓으시고 자식들을 기다리셨다.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친정 엄마 같은 분이셨다. 그런 시어머니께서 70세를 갓 넘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7년 동안 병석에 누워계시다 끝내 일어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시어머니의 교통사고로 필자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부조리한 죽음은 없다”고 말한 알베르트 카뮈의 말이 공감아 간다. 최근 필자가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맡게 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2551명(전남 218명)이 ‘부조리한’ 죽음을 맞았다. ‘차대사람’ 사고로 859명, ‘차대차’ 사고로 1041명, ‘차량단속’ 사고로 650명, ‘철길건널목’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이 중 ‘차대사람’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횡단 중에 419명, 차도 통행 중에 135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洸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주최·신청·배달 안배)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